

# 주요사업 관련 법령

2020. 4



한국시설안전공단

## 목 차

■ 설립근거	4
■ 사업 근거법령	4
■ 중기경영목표	5
■ 주요사업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밀안전진단	6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8
3. 시설안전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1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14
5. 소규모 취락시설 안전점검	18
6.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	22
7. 시설안전 선진 기술개발 및 보급	24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25
9.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27
10.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29
11. 해외사업	31
○ 건설기술 진흥법	
1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32
1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35
14. 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37
15. 설계의 안전성 검토	39
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41
17.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관리 및 종합평가	43
18.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결과 관리 및 종합평가	45
19.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	47
20. 건설기술용역평가 실시	50
21.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53
22.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5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지반침하 안전점검	60
24.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및 현지조사	62
25.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65
26.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68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7.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72
28.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지원	73
29. 기반시설 실태조사	74
30.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5
○ 도로법	
31.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78
32.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	81
33.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	83
○ 주택법	
34.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평가	86
3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89
36. 장수명주택인증	92
3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95
○ 공동주택관리법	
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98
3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0.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공적임무	102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41. 녹색건축인증	104
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05
43.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106
44.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109
○ 건축법	
45.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	112
4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4
○ 건축물관리법	
47.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118
48.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120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9.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122
5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123



## 설립근거

### ■ 시설물안전법 제45조 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설립

### ■ 정관 제1조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사업 근거법령

### ■ 시설물안전법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8.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 중기경영목표

설립 목적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설물안전법 제45조)		공중의 안전 확보 (공단 정관 제1조)		국민의 복리증진 (공단 정관 제1조)	
미션	예방적 시설관리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비전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 조성 선도기관					
공유 가치	<div>핵심가치</div> <div>전문성    생명존중    신뢰성</div>			<div>경영방침</div> <div>안전최우선    창의혁신    상생협력</div>		
5대 전략목표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설현장 안전성 제고	안전산업 역량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혁신	
KPI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70% 저감	취약시설 안전 확보 150% 향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률 40% 저감	안전기술인력 양성 10,000명 달성	재난관리, 청렴도, 고객만족도 등급 향상	
10대 전략과제	기반시설 안전 및 성능관리 강화	국민생활시설 안전체계 마련 및 관리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유지관리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강화	
	국가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국민 불편 해소	지하안전관리 강화	산업 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확대	KISTEC형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30개 실행과제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정밀안전진단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정밀안전진단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주요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li> <li>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시설 : 교량터널·댐·상수도 등</li> <li>-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147,800여 개소 중 의무 진단대상 10,300여 개소('20년 2월 말 기준)</li> <li>-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152개소는 공단이 전담하여 진단 실시</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설립 시부터 업무수행('95.4.19)</li> <li>※ 전담시설물 현황 : 510개소('95년) → 235개소('03년) → 212개소('10년) → 202개소('11년) → 191개소('12년) → 152개소('15년)</li> </ul>
수행부서	안전진단본부, 생활시설본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b>법</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6조제2항, 제49조제1호
	<b>영</b> 동법 시행령 제21조
	<b>규칙</b> -
	<b>고시</b>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3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b> <b>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b>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사장교(斜張橋)·아치교(arch橋)·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운영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생애주기(Life Cycle) 이력을 DB화하여 관리주체 등과 공유·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유지관리 및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운영</li> <li>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주요시설물의 기본현황, 설계도서,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이력의 체계적 관리</li> <li>시설물(147,651개소, '19년 말 기준)의 점검·진단, 유지관리 이력 관리</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설립 시부터 업무수행('95.4.19.)</li> <li>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03.1.2.)</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정보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table> <tr> <td>법</td><td>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제49조제4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td></tr> <tr> <td>영</td><td>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td></tr> <tr> <td>규칙</td><td>-</td></tr> <tr> <td>고시</td><td>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td></tr> </table>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제49조제4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영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규칙	-	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제49조제4호,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영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규칙	-								
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p> <p><b>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b>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b>제49조(사업)</b>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p> <p><b>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p>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제28조·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운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점검

### 3 시설안전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항 목	내 용	
사업명	기술자 교육훈련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 기술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관계 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li> </ul> </li> <li>신기술·신공법 등 실무 위주 및 최신 동향을 반영한 교육</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9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개반 운영 : 교량및터널반, 건축반, 수리시설항만반</li> </ul> </li> <li>주택관리사 안전점검반 신설('99.1.1.)</li> <li>수리시설반과 항만반 구분 실시('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반 운영 : 교량및터널반, 건축반, 수리시설반, 항만반</li> </ul> </li> <li>주택관리사 안전점검반 폐지('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 실시</li> </ul> </li> <li>정기안전점검과정 실시('18.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반, 토목반</li> </ul> </li> <li>정밀안전진단 보수과정, 성능평가과정 실시('18.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li> </ul> </li> <li>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실시('18.1.18.)</li> </ul>	
수행부서	인재교육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호
	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input type="checkbox"/>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b>제49조(사업)</b>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진흥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법

○ 도로법

○ 주택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구 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항 목	내 용	
사업명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리주체 또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점검·진단 부실예방 및 기술수준 향상 도모</li><li>◦ 주요 평가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점검·진단 대가기준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li><li>- 점검·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li><li>-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li><li>- 점검·진단 실시결과 D·E등급에서 상향 되었거나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 된 경우</li><li>- 점검·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 실시자가 실시한 점검·진단 실시결과(부실 통보 후 1년간)</li></ul></li></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02.1.14.)</li><li>◦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08.3.21.)</li><li>◦ 평가대상 확대(제1종시설물, 공동주택 등 점검대상 확대)('16.1.1.)</li><li>◦ 평가대상 확대(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18.1.18.)</li></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0조 제2항제2호, 제60조제3항
	영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제43조제2항제2호, 제44조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div>□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div> <div>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div>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리주체,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44조(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 5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항 목	내 용
사업명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전 확보 및 공공복리 증진</li> <li>◦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자율점검능력 배양</li> </ul> </li> <li>◦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공단 사업으로 규정(제29조제7호)(’08.3.21.)</li> <li>◦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업무위탁 규정 신설(’14.7.15.)</li> <li>◦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실시(’16.1.19.)</li> <li>◦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19.8.20.)</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영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고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내부규정)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b> <b>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운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3조 (권한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실시</li> <li>시설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 입력 등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 확인 및 점검</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에 시설물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근거 마련('14.7.15.)</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정보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 제60조제2항제5호
	영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2항제5호
	규칙	-
	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b> <b>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li> <li>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li> <li>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li> <li>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li> <li>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li> <li>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li> <li>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li> <li>8. 제28조·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li> </ol>		

9.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운영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3조(권한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점검



## 7 시설안전 선진 기술개발 및 보급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설안전 선진 기술개발 및 보급(기술개발, 연구)	
업무내용	◦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개발 - 융·복합형 선진화 기술개발 - 유지관리 효율화 기술개발 - 재해재난 선제대응 기술개발 - 미래지향적 안전정책 지원 및 기술기준 개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보급 및 전파를 통한 시설안전 기술수준 향상 도모	
연 혁	◦ 공단 설립 시부터 업무수행('95.5.18.) ◦ 시설안전연구소 설립('10.10.25.) ◦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안전기술연구소로 부서 명칭 변경('16.2.16.) ◦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성능연구소로 부서 명칭 변경('16.9.29.) ◦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성능연구원으로 부서 명칭 변경('19.7.1.)	
수행부서	시설성능연구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호 및 제3호
	영	-
	규칙	-
	고시	-
<div>□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div> <div>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div> <div>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div> <div>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div>		

##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검토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실적 관리 및 차기계획 작성 지원</li><li>– 시설물 관리주체가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 지원</li></ul></li><li>◦ 지침,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규칙 관리·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관리·운영 지원</li><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의 관리·운영 (15종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11종 시설물의 성능평가 대상)</li></ul></li><li>◦ SOC 성능종합보고서 발간</li><li>◦ 안전·유지관리 기술지원·정보제공</li></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령에 센터 운영 근거 마련('18.1.18.)</li><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개소('17.9.29.)</li></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호
	영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제9호 및 제10호
	규칙	-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 동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지침 및 비용 산정 기준과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 및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div>□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div> <div>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div> <div>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div>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법 제49조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 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2. 안전점검등 지침, 안전점검등 비용산정기준,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기준의 작성 지원
4.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6.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발간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과 통계의 생산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9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시설/궤도시설/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정(3개)</li> <li>- 기초 및 지반/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2개)</li> </ul> </li> <li>◦ 상수도/수문/제방/ 내진성능평가요령 보완·개정 연구용역 시행</li>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추진</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 제정('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 터널, 댐, 건축물, 제방, 상수도, 기초 및 지반(7개)</li> </ul> </li>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 개정('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 터널, 건축물(3개)</li> </ul> </li>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안) 마련('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문(1개)</li> </ul> </li> <li>◦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 댐, 건축물(3개)</li> </ul> </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4항, 제60조제2항제1호
	영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제43조제2항제1호
	규칙	-
	고시	-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p> <p>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법 제49조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제43조(권한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 10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초기 현장조사 실시</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구성·운영</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본부 터널실에서 임시사무국 운영(겸임)('19.2.21.)</li> <li>◦ 법령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위탁 운영 근거 마련('20.2.21.)</li> </ul>	
수행부서	재난안전기획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제6호
	영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3조제2항제7호
	규칙	-
	고시	-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p> <p><b>제58조(사고조사 등)</b>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b>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p>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11 해외사업

항 목	내 용	
사업명	해외사업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 수행 : 국토교통부부 ODA사업수행</li> <li>◦ 해외사업 발굴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사업</li> <li>◦ 해외사업 지원 : 진출지원관 운영, 한-개도국 연례회의 진행,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한국형 기술전파</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팀 신설('14.7.16.)</li> <li>◦ 시설성능연구소로 해외사업 업무 이관('17.9.29.)</li> <li>◦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성능연구원으로 부서 명칭 변경('19.7.1.)</li> </ul>	
수행부서	시설성능연구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
	영	-
	규칙	-
	고시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29호)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 건설기술 진흥법

### 1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검토</li> <li>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공단이 전담하여 검토</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06.1.1.)</li> <li>법령 개정에 따라 제1·2종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공단이 전담 수행('14.5.23.)</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
	영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항부터 제6항
	규칙	-
	고시	-
<p>□ 건설기술 진흥법</p> <p><b>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b>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b>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b>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p>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중층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확인을 위해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li> </ul> </li> <li>안전관리계획서의 형식적 작성 및 부실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실시</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목 신설('18.12.31.)</li> <li>시행령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목 신설('19.6.25.)</li> <li>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업무 공단 위탁('19.8.6.)</li> <li>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적정성 검토 업무 공단 위탁('19.8.6.)</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 및 제10항
	영	동법 시행령 제98조제7항부터 제10항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b>□ 건설기술 진흥법</b> <b>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b>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와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법

○ 노후법

○ 주택법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너.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에 접수·확인·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머.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 점검결과에 적정성 검토	한국시설안전공단

## 14 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의 이행확인을 위해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li> </ul> </li> <li>안전점검의 형식적 수행 및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실시</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에 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목 신설('18.12.31.)</li> <li>시행령에 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및 적정성 검토 항목 신설('19.6.25.)</li> <li>안전점검결과와 접수·확인·관리 업무 공단 위탁('19.8.6.)</li> <li>안전점검결과와 적정성 검토 업무 공단 위탁('19.8.6.)</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5항 및 제10항
	영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에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에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에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결과에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 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확인·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머.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 점검결과에의 적정성 검토	한국시설안전공단

## 15 설계의 안전성 검토

항 목	내 용	
사업명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중 실시설계 시 발주청이 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연 혁	◦ 법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항목 신설('16.5.19.) ◦ 시행령 개정(2019.6.25.)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를 공단이 전담 수행('19.6.25.) ◦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 접수·확인·관리 업무 공단 위탁('19.8.6.)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영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⑩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안전제도의 이행현황 확인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 수행</li> <li>- 건설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및 통계화</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항목 신설('15.5.18.)</li> <li>◦ 시행령에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항목 변경 및 신설('19.6.25.)</li> <l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 공단 위탁('19.7.16.)</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부터 제17항
	영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4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p>□ 건설기술 진흥법</p> <p><b>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b>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확인·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제출·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출·검토·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한국시설안전공단

## 17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관리 및 종합평가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공평가 결과 접수·관리 및 종합평가	
업무내용	◦ 발주청은 건설안전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그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종합평가 시행 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함	
연 혁	◦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 도입('87.10.24.) ◦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업무 공단 위탁('10.12.30.) ◦ 시공 종합평가 업무 공단 위탁('14.5.23.)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영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9호, 제2항제6호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8 건설공사 기술용역평가결과 관리 및 종합평가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 접수·관리 및 종합평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청은 건설안전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li> <li>건설공사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종합평가 시행 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함</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제도 도입('95.1.5.)</li> <li>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업무 공단 위탁('14.5.23.)</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영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9호, 제2항제6호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b>□ 건설기술 진흥법</b> <b>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b>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6. 한국시설안전공단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파.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



## 19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

항 목	내 용	
사업명	시공평가 실시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의뢰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li> <li>기술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수행이 어려운 발주청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평가 업무 대행</li> </ul>	
연 혁	국토교통부 고시에 시공평가업무 공단 의뢰 규정 신설('14.12.30.)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영	동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제83조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
<b>□ 건설기술 진흥법</b> <b>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b>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6. 한국시설안전공단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파.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 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일반사항)** ③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용역은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말일까지
2.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 20 건설기술용역평가 실시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설기술용역평가 실시	
업무내용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의뢰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 ◦ 기술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수행이 어려운 발주청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평가 업무 대행	
연 혁	◦ 국토교통부 고시에 건설기술용역평가업무 공단 의뢰 규정 신설('15.7.10.)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영	동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제83조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



<p>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 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p> <p>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b>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b>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p> <p><b>제2조(정의)</b>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평가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p> <p><b>제3조(일반사항)</b> ③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p> <p>1. 기본설계용역은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말일까지</p> <p>2.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p> <p>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p>

## 21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 공정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평가</li> <li>◦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公共工事) 대상, 공기(工期) 50%수준의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본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 및 결과 공개</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도입('15.5.18.)</li> <li>◦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16.1.12.)</li> <li>◦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 위탁기관 고시('16.10.31.)</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평가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
	영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3, 제117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6호
	규칙	-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65조부터 제7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p>□ <b>건설기술 진흥법</b></p> <p><b>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b>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 <b>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b></p> <p><b>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p> <p>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p> <p>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p>		



-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6. 한국시설안전공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50%에 이르지 않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를 최종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6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여 제6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 22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고의 예방업무부터 사고 후속조치까지 건설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건설현장 사고조사, 건설사고 조사, 분석, 대책수립, 건설 사고 사례 전파 교육, 사고사례 DB 구축 등</li> </ul> </li> <li>◦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원인을 설계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사고 요소를 사전 제거 함으로써 사고 예방</li> </ul> </li> <li>◦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구성·운영</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개정에 따라 공단 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14.5.23.)</li> <li>◦ 사무국을 평가본부 건설안전평가실로 병합하여 사무국 운영('18.4.30.)</li> <li>◦ 건설안전평가실에서 분리되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서 운영 ('19.7.1)</li> </ul>	
수행부서	재난안전기획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5항, 제68조, 제82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6호 및 제2항제6호
	규칙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1호)
<b>□ 건설기술 진흥법</b> <b>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b>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b>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b>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버.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6. 한국시설안전공단

####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시설안전공단

####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1호)

**제18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
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현장조사

4. 건설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5. 건설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8.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9. 건설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지반침하 안전점검

항 목	내 용	
사업명	지반침하 안전점검	
업무내용	◦ 전국 취약도로의 지반침하(함몰) 사고예방을 위한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취약지역 탐사 및 지자체에 기술지원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연 혁	◦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14.12.4.)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16.8.23.) ◦ 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점검 수행('18.1.1.)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지반안전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영	-
	규칙	-
	고시	-
<b>□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b> <b>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b>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24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및 현지조사

항 목	내 용	
사업명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시행)에 따라 대규모 지하 개발 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안전성을 미리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li> <li>지반침하(싱크홀)의 지속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보완·조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후에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지·예방</li> <li>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실시</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수행('18.1.1.)</li> </ul>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지반안전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49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
	규칙	-
	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호)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20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 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강영종(姜永宗)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 (위탁업무)
      -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검토 및 현지조사
      - ② 지하안전영향 재평가
      - ③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 ④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관리
3. 위탁기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최초 시행되는 '18년 1월 1일부터 5년간(2022년 12월 31일까지)

## 25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항 목	내 용	
사업명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정보를 DB화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과 공유·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지하안전관리 및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운영</li> <li>◦ 지하안전정보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대행 실적 등에 관한 사항</li> <li>-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li> <li>-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점검 및 평가업무 전문 기술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관계 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li> </ul> </li> </ul>	
연 혁	◦ 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18.1.1.)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지반안전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호)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강영종(姜永宗)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 (위탁업무)
      -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검토 및 현지조사
      - ② 지하안전영향 재평가
      - ③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 ④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관리
3. 위탁기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최초 시행되는 '18년 1월 1일부터 5년간(2022년 12월 31일까지)



## 26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내용	◦ 지하시설물의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를 통한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하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조사 실시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현장조사 실시	
연 혁	◦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14.12.4.) ◦ 지반안전센터 T/F팀 설치('15.4.13.) ◦ 근거법령 제정에 따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18.1.1.)	
수행부서	재난안전기획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
	규칙	-
	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div>□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div> <div>제46조(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div> <div>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div>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호)

**제12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관리
-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
-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강영종(姜永宗)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 (위탁업무)
    -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검토 및 현지조사
    - ② 지하안전영향 재평가
    - ③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 ④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관리
- 3. 위탁기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되는 '18년 1월 1일부터 5년간(2022년 12월 31일까지)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27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업무내용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목표, 유지관리 실시, 재정투자, 정보화 관련 사항 등 중장기적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 해당 검토의견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에 즉각 활용
연 혁		◦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20.1.1.) ◦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업무 공단 위탁('20.1.1.)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제3항, 제26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규칙	-
	고시	-
<div>□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div> <div>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div> <div>제2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다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div> <div>□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div> <div>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div> <div>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div>		

### 28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지원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 지원	
업무내용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 시 전문 의견 제시 등 지원업무 실시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과의 부합성 검토 -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지원 -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검토 매뉴얼 작성	
연 혁	◦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20.1.1.) ◦ 공단을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의견제시 기관으로 규정('20.1.1.)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영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규칙	-
	고시	-
<div>□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div> <div>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고시하여야 한다.</div> <div>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div> <div>□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div> <div>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div> <div>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div> <div>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div>		



## 29 기반시설 실태조사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기반시설 실태조사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 집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상세제원, 유지관리정보(이력), 예산투입이력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단계적으로 구축</li> <li>- 규모 및 관리체계가 상이한 기반시설 관련 자료의 표준화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정보를 통해 통계기반의 정책수립 기반 마련</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20.1.1.)</li> <li>◦ 기반시설 실태조사 대행기관 업무 수행('20.1.1.)</li> <li>◦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실시('20.)</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규칙	-
	고시	-
<p>□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p> <p><b>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b>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 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p> <p><b>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b>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한국시설안전공단</p>		

## 30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을 포괄하는 관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국가 재정의 적정 지원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li> <li>* 기반시설 제원, 노후화, 점검·보수보강 이력, 예산 투입 등을 DB화하여 총괄 관리·운영</li> <li>- 국가 재정의 적정 지원 의사결정 및 과거 이력 정보를 토대로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의 총괄 관리</li> <li>◦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 및 정보 제공 요청 등</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20.1.1.)</li> <li>◦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20~)</li> <li>◦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후 운영 업무 수행 예정('21)</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시설성능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영	동법 제13조제2호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고시	-
<p>□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p> <p><b>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2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b>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지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 도로법

○ 주택법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요청

##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로법

### 31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항 목	내 용
사 업 명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계측시스템을 기반으로 특수교(현수교, 사장교)에 대한 실시간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안전 감시, 긴급 대응 및 건전성 확보</li> <li>- '20년 2월 현재 33개 특수교 유지관리</li> <li>※ 진도대교, 제2진도대교, 완도대교, 목포대교, 고군산대교, 전주천교, 소록대교, 거금대교, 거북선대교, 화태대교, 영광대교, 팔영대교, 삼도대교, 장보고대교, 장자교, 세풍대교, 천사대교1, 천사대교2, 칠산대교, 둔병대교, 노량대교, 서안동대교, 동강대교, 동이대교, 원산안면대교, 돌산대교, 화양대교, 백야대교, 압해대교, 신거제대교, 삼천포대교, 초양대교, 남해대교</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08.11.19.)</li> <li>특수교유지관리센터 신설('12.1.1.)</li> <li>※ 특수교 유지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에 의한 관리 : 17개소('13년) → 15개소('14년) → 17개소('15년) → 21개소('16년) → 24개소('17년) → 28개소('18년) → 32개소('19년) → 33개소('20년)</li> <li>- 지자체(사천시) 계약에 의한 위탁 : 2개소(삼천포대교, 초양대교)</li> <li>- 지자체(남해군) 계약에 의한 위탁 : 1개소(남해대교)</li> </ul> </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특수교관리센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사천시 도로과, 남해군 건설교통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div>법</div> <div>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9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div>
	<div>영</div> <div>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div>
	<div>규칙</div> <div>-</div>
	<div>고시</div> <div>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670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2호)</div>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 □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0호)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 한정된 예산에 관리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일반국도 특수교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유지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일반국도 특수교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 대표자 : 신방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 대표자 : 조용주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특수교 통합유지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 안전점검(정기, 정밀) 등 일반국도 특수교 순회점검(비상시 대응) ○ 기존 특수교 위탁관리 기관의 업무감독 및 지도 ○ 기존교량 계측시스템 보완 및 신설교량 계측시스템 구축지도 ○ 통합관리계측시스템 운용·관리 ○ 계측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및 분석 ○ “특수교량 통합관리계측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특수교 유지관리 매뉴얼” 정비 ○ 계측자료 DB활용방안 수립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2호)	
제10조(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간의 지진방재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9. 한국시설안전공단	

## 32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

항 목	내 용	
사업명	교량 및 터널 관리시스템 운영업무 위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교량 내진설계·성능평가·보강공사 상세현황 조사 및 분석</li> <li>◦ 교량 관련 내진기준 제·개정 현황(기준강화 여부 등) 분석</li> <li>◦ 교량 내진성능 현황 파악 및 보강계획 수립</li> <li>◦ 국도 상 건설 중인 교량의 현행 내진기준 반영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li> <li>◦ 내진업무 관련 발주처 요구에 따라 조사 및 분석 수행</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95.1.)</li> <li>◦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운영('14.1.9.)</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9호 도로법 제59조제1항, 제110조제3항제4호
	영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규칙	-
	고시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 도로법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b>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b>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 도로법 시행령</b> <b>제101조(업무의 위탁)</b>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b>□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b>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호)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일반국도 교량의 정보 수집·조사·갱신, 장단기 유지관리 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교량관련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일반국도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에 의거 교량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①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 ② 대표자 : 우효섭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①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번지 ② 대표자 : 장기창

### 33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

항 목	내 용	
사업명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 업무	
업무내용	◦ 일반국도 상에 분포하는 비탈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붕괴사고 및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형 유지관리업무 ◦ 현황조사(기초조사), 위험비탈면 정밀조사, 정비방안 도출, 설계 자료 검토, 2종 비탈면 정밀안전점검 결과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관리대상 비탈면 : 30,751개소('19년 기준)	
연 혁	◦ 유지관리시스템 개발('97.12.~'01.3.)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01.3.) ◦ 위탁기관 지정 고시('15.2.27.)	
수행부서	건설안전본부 지반안전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9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영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규칙	-
	고시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2호)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b> <b>제49조(사업)</b>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b>□ 도로법</b> <b>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b>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2호)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 ○ 주택법

### 34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평가

항 목	내 용	
사업명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평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 내 결로 방지 성능평가 수행</li> <li>공동주택 세대 내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출입문, 벽체 접합부, 외기 직접창)의 일정한 온도차이비율(TDR)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 확보</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고시('13.1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5호)</li> <li>업무수행('14.5.7.) (공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80호)</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주택법 제35조
	영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규칙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
<b>□ 주택법</b> <b>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b>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li> <li>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li> <li>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li> <li>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li> <li>5. 대지조성기준</li> <li>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li> </ol>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 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

**제6조(성능평가 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항 목	내 용	
사업명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에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에 대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적절성 검토 요청 시 평가 수행</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정('09.10.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014호)</li> <li>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전문기관 지정('13.1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4호)</li> <li>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15.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4호)</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15조제1항
	영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27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규칙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37호)
<b>□ 주택법</b>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법

노후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37호)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6 장수명주택인증

항 목	내 용	
사업명	장수명주택인증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수명 주택 인증기관 지정('14.12.25.)</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주택법 제38조
	영	-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부터 제22조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9호)

**□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에서 인증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2. 벽체재료 및 배관·기동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수·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인증등급이 달라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명단(인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20조(재심사 요청 등)</b>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수명 주택 인증서의 인증 등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재심사 요청 절차,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1조(인증 수수료)</b>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b>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p>
---

## 3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항 목	내 용	
사업명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대상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의 및 검토</li> <li>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수직증축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법제화('14.4.24.)</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지정('14.4.24.)</li> <li>시행령에 검토 의뢰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근거 마련('18.6.5.)</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생활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주택법 제69조
	영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칙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6호)
<p>□ 주택법</p> <p><b>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b>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노후법

○ 주택법



## ○ 공동주택관리법

### 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li> <li>(하자여부 판정)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의 하자여부 판정</li> <li>(분쟁조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등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간 분쟁의 조정</li> <li>(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하자 판정 후 전문가 의견(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li> <li>(기타)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업무 수행</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공단 수행 근거 마련('10.10.6.)</li> <li>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10.12.30.)</li> <li>집합건물 하자판정 업무 개시('13.6.19.)</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div>법</div> <p>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p>
	<div>영</div> <p>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p>
	<div>규칙</div> <p>-</p>
	<div>고시</div> <p>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훈령 제1146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1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국토교통부 고시 2016-553호)</p>

####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3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항 목	내 용	
사업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li> <li>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이 되지 않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실시</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업무 공단 위탁 근거 마련('10.10.6.)</li> <li>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16.8.12.)</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생활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영	동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제10항
	규칙	-
	고시	-
<p>□ 공동주택관리법</p> <p><b>제33조(안전점검)</b>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b>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li> <li>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조성지관리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40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공적임무

항 목	내 용	
사업명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및 현지조사, 보고서 적정성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li> <li>주택 재건축 실시를 위한 현지조사</li> <li>조건부재건축 보고서 적정성 여부 검토</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10.10.6.)</li> <li>국토교통부 고시에 재건축 여부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18.3.5.)</li> <li>시행령에 현지조사 수행 근거 마련('18.5.8.)</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생활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영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규칙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1-3-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4-4. 조건부 재건축: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41 녹색건축인증

항 목	내 용
사업명	녹색건축인증
업무내용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연 혁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12.7.19.) ◦ 녹색건축 인증기관 재지정('18.6.28.)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
	영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규칙 -
	고시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b> <b>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b>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녹색건축의 인증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b> <b>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b>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내용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유도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연 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12.2.2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재지정('19.1.21.)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
	영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규칙 -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b> <b>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b>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b> <b>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b>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43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항 목	내 용	
사업명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	
업무내용	◦ 건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유도	
연 혁	◦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업무 위탁('15.11.24.)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제13조의2
	영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제1항제5호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2호)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 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2호)

**제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 및 법 제13조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의 업무를 영 제19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한다.

## 44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시책인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기관 지정('11.9.16.) (공문: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8644호)</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영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FIDEX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녹색건축물에  
조성 지원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정한다.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 시 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 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 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권자(「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검토·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⑦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축법

### 45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	
업무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 주민 간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해결	
연 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 공단 위탁('14.11.2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개소('14.7.16.)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축법 제88조, 제103조
	영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0
	규칙	-
	고시	-
□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3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 46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항 목	내 용	
사업명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전 건축물 구조와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여부 검토</li> <li>-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하기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영향평가 기관 지정('1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호)</li> </ul>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생활안전관리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축법 제13조의2
	영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2호)
<b>□ 건축법</b> <b>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b>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것
-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 시설물의 현황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 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2호)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조성지원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 건축물관리법

### 47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관리 정책 및 상담지원)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신설·개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상담지원</li> <li>◦ (실태조사)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li> <li>◦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 시키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 평가 수행</li> </ul>	
연 혁	◦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신규업무('20.5.1.)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축물관리법 제6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5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영	-
	규칙	-
	고시	-
<b>□ 건축물관리법</b> <b>제6조(실태조사)</b>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b>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b>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제1항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8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항 목	내 용	
사 업 명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출하는 해체 계획서의 내용 검토</li> <li>-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공단이 전담하여 검토</li> </ul>	
연 혁	○ 근거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 수행('20.5.1.)	
수행부서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영	동법 시행령(안) 제31조제3항
	규칙	-
	고시	-
<b>□ 건축물관리법</b> <b>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b>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li> <li>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li> <li>나.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건축물</li> <li>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5개 층 이하인 건축물</li> </ol> </li> </ol>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해체계획서의 검토)**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49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항 목	내 용	
사 업 명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실태조사 및 도면·구조계산서 등 서류 검토, 내진성능평가</li> </ul> </li> <li>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제도 도입('11.5.30.)</li> <li>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규정('11.11.30.)</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
	영	-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고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p>□ 지진·화산재해대책법</p> <p><b>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b>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p> <p>□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p> <p><b>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b>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li> <li>「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li> <li>「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li> </ol>		

### 5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항 목	내 용	
사 업 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민원 응대</li>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 접수</li>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li>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 구성·위촉 및 운영</li>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회 개최</li> <li>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및 명판 교부</li> </ul> </li> </ul>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17.10.24.)</li> <li>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2018.12.4.)</li> <li>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2019.2.14.)</li> <li>공단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19.3.6.~)</li> </ul>	
수행부서	시설관리본부 국가내진센터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6조의4
	영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2호
	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고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3호)
<p>□ 지진·화산재해대책법</p> <p><b>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공단 주요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경영관리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